

# 6천피된 날 국회 ‘3차 상법’ 가결… 여야 ‘법외곡죄’ 격돌

與 주도…자사주 소각 의무화 담겨  
국힘 “적대적 M&A에 취약” 반대  
민주, 일부 위험 우려에 수정안 도출

국회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개정안을 25일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1년 내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코스는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37분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7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회 법사 필리버스터는 재석 3분의 1 이상이 종결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 이후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처리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1년 이내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가를 제고하고 지배력 강화 등 수단으로 악용

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안은 기존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줘 법 시행 이후 1년6개월 안에 소각하도록 한다. 아울러 임직원 보상 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시 헤지펀드 등 소위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할 방어 수단이 제약된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법이 상정되자 윤한홍 의원을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상법개정안 처리 이후 ‘법외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과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모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법외곡죄 상정 후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첫 주자는 조배숙 의원이 다. 하지만 해당 법안 역시 24시간을 경과해 오는 26일 오후 처리될 예정이다.

법외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일부 위험 우려를 고려해 막판에 수정안을 도출했다. 법관과 검사가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의 유불리를 초래하는 부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도 추상적인 요건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외곡죄’를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험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이 대통령 “경자유전, 이승만 헌법 명시”

농지 매각 명령 비판에 SNS서 반박  
“공산당식 발상? 원칙 이해 못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농지 매각 명령 방침에 대해 “상속받은 농지나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비판하는 이들에게는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투기 목적으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를 지적한 것”이라며 농지 매각 명

령 대상자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24일) 국무회의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며 휴경지 등 농지 관리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自耕)할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

다”고 지적했다.

또 농지 매각 명령이 ‘공산당식 발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끌어와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 명령이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며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 장동혁 “내 집 마련 꿈, 왜 마귀 취급하나”

국힘 특위, 서울 부동산 현장 방문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 등 제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가진 분들을 마귀로 악마화하는 것이 이 정부라면, 그분들의 소중한 꿈을 내 꿈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부동산정책 3년 예고제와 민간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2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 타운을 찾아 부동산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교육하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정부의 ‘다주택 매매 유도’ 정책을 비판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국민의힘 부동산정책특위 특별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장 대표는 “그저 말로 겁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거나 집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집 가진 분들과 집 가지지

못한 분들을 갈라치기 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저희 국민의힘에서 바로잡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미 수치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엉망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정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한 주민의 질의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제한의 정도를 넘어서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 정책 설계 과정의 고충과 관련한 질문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든, 정책을 추진하든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일단 해보고’라고 한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정책 발목 잡는 정당처럼 보이고, 민주당은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싸질러 놓은 걸 치우느라 국민의힘이 너무나 무힘들다”고 토로했다. /서예진 기자

## “수도권 편중 관광, 지역 중심 재편”

이 대통령 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방향 관광·지역관광 대도약 방안 발표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관광산업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전국 골목상권,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래 입국자 3000만명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편중 관광을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고, 관광생태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 산업은 성장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 직속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날 회의 슬로건은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관광산업 대전환을 기필코 이루겠다는 각오로 각 부처 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 공황과 크루즈 인프라부터 출입국 제도 개선에 이르기까지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세세하게 살피고 또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강진군의 ‘반값여행’처럼 여행비 부담은 덜고 혜택은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는 관광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이 대통령은 관광지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호객행위 등 부당행위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여행객들의 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길을 돌리는 부당 행위”라며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요금,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는 결국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악질적 횡포여서, 반드시 미리 뿌리 뽑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부진 회장을 포함한 많은 분에게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며 이 사장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서예진 기자

## 靑, 국민안전비서관 신설, 범죄예방 총괄

이종원 충북경찰청장 내정

청와대는 25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경찰대(7기)를 졸업했다. 이후 충북청 생활안전과장, 경찰청 자치경찰운영지원팀장, 서울 광진경찰서장과 송파경찰서장,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

기북부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제39대 충북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국민안전비서관은 범죄예방과 공공안전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안전 정책 점검 및 법·제도 개선, 범죄·사고 대책의 체계적인 관리 및 공공안전·범죄 실태를 종합 분석이 주요 업무다. 이를 통해 민생 침해 요인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다. /서예진 기자